

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, 사회보장정보원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공개

<2018. 9.28.(금) 감사실>

추진배경

-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아 그동안 우리원 직원 및 관계자의 청탁 금지법 상담내용을 공유하여,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의 초석 마련

공개방법 : 사내 인트라넷 및 우리원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

주요 상담내용

구분	질의내용	질의 처리방법
1	용역 계약 업체와 주간회의 진행 후, 사업자와 우리원 업무담당 직원이 함께 식사가 가능한지 여부 ('17. 09.)	감사실 유권해석 → 질의부서로 답변 회신
2	유관기관과의 업무 회의 후, 유관기관 담당자가 감사의 의미로 기관 홍보물품을 주었을 경우,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 ('17.07.)	감사실 유권해석 → 질의부서로 답변 회신
3	지자체의 외부강의 의뢰에 대해 사례금 수령과 더불어 우리원 출장비 수령 가능한지, 혹은 지자체에서 사례금과 별도로 교통비와 숙박비 제공 시 수령 가능한지 여부 ('17.10.)	감사실 유권해석 → 질의부서로 답변 회신
4	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공직자(부장)에게 부서원들이 일정금액을 각출하여 선물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('18.06.)	감사실 유권해석 → 질의부서로 답변 회신
5	추석명절, 유관기관 및 국회 등 직무관련자에게 명절 선물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('18.09.)	감사실 유권해석 → 권익위 청탁금지해석과 유선 상담 → 질의부서로 답변 회신

☐ 상담 상세내용

<질의내용>

1. 용역 계약 업체와 주간회의 진행 후, 사업자와 우리원 업무담당 직원이 함께 식사가 가능한지 여부

<답변내용>

- 우리원에서 용역사업자에게 식사를 대접할 경우, 용역사업자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금액의 제한 없이 식사 제공이 가능합니다.
- 용역사업자가 우리원 직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할 경우,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,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·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은 가액범위(3만원) 범위 안에서 식사 제공이 가능합니다.
 - － 해당 용역사업은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고 업무 회의 후 용역사업자와 사업 관리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로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의해 가액 범위(3만원) 안에서 식사가 가능합니다.

<질의내용>

2. 유관기관과의 업무 회의 후, 유관기관 담당자가 감사의 의미로 해당기관의 홍보물품을 주었을 경우 수령 가능 여부

<답변내용>

-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 ‘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·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’에 따라, 해당기관의 홍보물품 수령이 가능합니다.

- 다만, 홍보용품이 해당기관의 로고·명칭 표시가 되어 있는지,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,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주어졌는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감사의 마음만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.

<질의내용>

3. 지자체의 외부장의 의뢰에 대해 사례금 수령과 더불어 우리원 출장비 수령 가능한지, 혹은 지자체에서 사례금과 별도로 교통비와 숙박비 제공 시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

<답변내용>

- 외부장의 사례금과 우리원 출장비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.
 - 우리원 내부기준인 「외부장의등 신고·관리업무 세부기준」에 의해 ‘직무와 관련하여 업무시간에 출장으로 외부장의를 진행하는 경우 요청기관에서 제공하는 사례금과 우리원 출장비는 중복으로 수령이 불가’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(주무부처 감사 지적 사항)
- 외부장의 사례금과 요청기관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교통비, 숙박비 수령은 가능합니다.
 -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의제2호라에 따르면 ‘소속기관에서 교통비, 숙박비,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요청기관의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,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’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.
 - 따라서, 요청기관에서 제공하는 외부장의 사례금과 실비의 교통비, 숙박비는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.

<질의내용>

4.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공직자(부장)에게 부서원들이 일정금액을 각출하여 선물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

<답변내용>

-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·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가액범위(5만원, 농수산물 10만원) 범위 안에서 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불가합니다.
- － 다만, 퇴직을 한 이후에는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

<질의내용>

5. 추석명절, 유관기관 및 국회 등 직무관련자에게 명절선물 제공 가능 여부

<답변내용>

- 추석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유관기관 및 국회 등 직무관련자에게 일괄적인 선물을 제공할 경우,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·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가액범위(5만원) 범위 안에서 제공이 가능하지만
- － 국회의 경우, 우리원은 10월 경 국정감사를 피감함에 따라 직무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청렴한 공직사회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국회에 추석 명절선물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.